

국회도서관에 영구보존되는 JP의 정치 기록유산



김종필 전 총리 기록물 기증협약 서명식에서 김 전 총리의 장녀 김예리 여사와 허용범 국회도서관장(2019. 6. 19.)

국회도서관장 허용범

yb22032@nnet.go.kr



저작자표시(BY)

국회도서관은 지난 6월 19일 김종필 전 국회의원(JP)의 유족과, 작년에 작고한 JP의 정치관련 기록유산 및 도서 일체를 기증받기로 협약서 서명식을 가졌다. 그 달 23일 JP의 1주기를 앞두고, 장녀 김예리씨가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9선의 최다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한국 현대정치사의 주역이었던 JP의 정치적 발자취가 온전하고도 영구히 국가도서관에 보존되게 되었다.

앞으로 구체적 인수인계 및 목록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JP가 남긴 기록관련 유산은 그의 정치이력에 걸맞게 엄청난 양이다. 도서관 이삿짐 포장박스로 300박스가 넘는다. 작고 전 JP의 호를 따 설립된 운정재단을 중심으로 보관되어온 각종 기록, 사진, 비디오 등도 수천 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분류해 나갈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해 누구나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나는 과거 기자시절, JP의 출생에서부터 정치의 황혼기까지 그의 일대기를 형제들의 증언과 현장취재를 통해 생생히 재구성해본 적이 있다. JP라는 한 인물의 드라마틱하고도 파란만장한 일생을 통해, 일제강점기시대부터 정부수립, 전쟁, 혁명, 쿠데타, 경제개발과 민주화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욕을 되짚어본 것이다. 취재과정에서 수많은 자료를 읽어보고 증언을 들었지만, 정작 JP의 청구동 서재는 들여다보지 못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평생을 그 한 집에서만 살아온 JP의 서재에는 도대체 무

엇이 있을까 하는 의문과 호기심을 늘 갖고 있었다. JP의 기록유산이 마침내 국회도서관에 온다는 것은, 의정활동 기록의 보존이란 측면에서도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기록문화가 발달해 있었고, 기록을 함부로 버리거나 취급하지 않는 문화였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신이나 정당에 관한 기록을 남기려하지 않고 폐기하는 악습이 생겨났다. 대체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정치현실 때문에, 훗날 문제가 될 소지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이해되는 나쁜 풍토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임기 말이 되면 의원실에서는 종이파쇄기를 갖다놓고 사무실 안의 모든 자료를 파괴하는 진풍경을 연출해왔던 것이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수십 년 역사의 정당이나, 선거철 거의 뒤편 수준으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군소정당이나,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기는 별 차이가 없다. 작년에 국회기록보존소 직원들은, 한 때 대통령 후보까지 났던 정당이 문을 닫는 날 당사에 뛰어가 입구에 걸려있던 현판이 부서지기 전에 인수해 온 적도 있다. 출판물 형태의 기록은 그나마 실체라도 있지만, 정당과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의정활동은 수집을 엄두도 내기 어려울 만큼 의정활동기록의 보존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JP의 유족이 이번에 그 같은 기증의사를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많은 정치인들에게 마땅히 본받을 선례로 남을 것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의원과 정당의 정치활동은 최고의 공적 영역이고 국민의 돈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 기록도 공적영역에서 남는 게 당연한 일이다.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 아닌 한, 모든 의정관련 기록은 온전히 보존되어야 하고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근래 들어 이 같은 의정활동 기록의 보존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국회의장인 문희상 의원의 경우, 본인이 국회 부의장일 때 이미 모든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바가 있다. 그러다 작년 국회의장이 되어서는 아예 그때그때 국회도서관으로 자료가 넘어갈 수 있도록 자료이관을 상시적 시스템화 해오고 있다. 그 전임 정세균 국회의장도 의장 재임시절 자료 일체를 기증했으며, 그 전 정의화, 임채정, 이만섭 국회의장 등도 상당한 양의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남겼다.

근래 들어 가장 인상적이고 널리 알리고 싶은 사례는 이종찬, 현경대, 김형오 전 국회의원의 경우이다. 이종찬 의원은 평생 보관해온 정치활동 자료 전체(책과 자료 총 9,300여 점)를 기증해 주었다. 현경대 의원은 1987년 개헌과정을 담은 자필 메모 등 386점을,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서적 1,546권과 5선 국회의원의 활동이 송두리째 담긴 기록물 4,000여점을 모두 국회도서관으로 넘겨주었다.

국회도서관에는 이처럼 순수한 뜻으로 자신이 소장하던 책을 수백, 많게는 수천 권씩 기증해 주는 분들이 이어져 왔다. 한 권 한 권 생각의 밑거름이 되었고, 여러 추억과 손때와 메모가 묻어있을 책을 통째로 국가도서관에 기증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으로는 번거로운 것이고, 또 국회도서관에 소장되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근래 들어 점점 늘어나는 이러한 자발적 도서 및 의정활동 자료 기증자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에 대한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회도서관에서는 전현직 국회의원 등 개인이나 단체가 2,000권 이상의 책을 기증해줄 경우 ‘개인문고’를 설치해 주고 있다. 1993년 윤치영 전 국회부의장이 남긴 책 전부를 기증받아 그분의 호 동산(東山)을 따 만든 ‘동산문고’(3,294책)를 시작으로 현재 12개의 문고가 있다. 정일

형 박사-정대철 국회의원-정호준 국회의원 3대의 이름을 딴 ‘3대문고’(7,256책), 한겨레신문사장을 역임한 ‘송건호문고’(7,230책), 주미국 대사를 역임한 양성철 전 국회의원의 ‘양성철문고’(3,879책), 허주(虛舟) 김윤환 전 국회의원의 ‘김윤환문고’(3,450책), 김진배 전 국회의원의 ‘김진배문고’(4,371책)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문고라 해서 별도의 열람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증의 의미를 살린다는 뜻에서 작은 표식이 붙은 별도 서각에 보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증자의 입장에서는, 국회도서관에 자신의 책이 개인문고 형태로 보존되는 것은 남다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안전하고도 영구적으로 후손에 남겨지고 활용된다는 점에서, 자력이나 창고 구석에서 사그라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다.

우리 도서관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한 출판사 사장으로부터 일본책 1,000여 권을 기증받았다. 40여 년 간 주로 경제경영마케팅 분야 전문서적을 출판해온 박경일씨(65·한국산업훈련연구소 대표)였다. 그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한 선친이 아끼고 읽던 책이라며, 소중히 보관해오던 책 전부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하기로 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이 책들은 선친께서 출판업을 해오시는 데 바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회사를 물려받아 있습니다만, 그간 우리 회사에서 출판한 서적이 무려 159종이나 됩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읽고 아끼고 출판사업의 기반이 되던 이 책이 이제 국회도서관처럼 권위 있는 곳에 보관돼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백, 수천 권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국회의원 보좌진 중에는 국회를 떠나면서 비록 몇 십 권이지만 자신이 갖고 있던 책을 소중히 국회도서관에 넘겨주고 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평생 애지중지한 수천 권의 자료를 기증하는 정치인이나,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외서(外書)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가져오는 이나 뜻은 한결같을 것이다. 책을 아끼고 지식을 소중히 여기며, 국회도서관을 통해 자신의 삶과 분투의 흔적들이 오랫동안 보존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고 활용돼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